



## EU 신재정협약 합의 내용

이경아 연구원

- EU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유럽연합 국가들이 신재정협약(the fiscal compact)에 가입할 것을 합의함.
  - EU 신재정협약은 2011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지역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화 사용 17개 국가와 10개 비유로화 사용 국가 중 영국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체결한 협약임.
  - 이는 재정균형을 위해 회원국의 정부부채 규모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벌칙을 가하는 것과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자금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.
  
- 협약에 따라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 차원의 감독과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각종 경제지원책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임.
  -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정부부채 규모를 GDP의 60%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재정적자를 GDP의 0.5%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.
  - 또한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 문제의 심각함을 감안하여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.
  
- 이번 회담으로 유럽안정화기구(ESM)의 출범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사안이었던 구체적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연기됨.
  - 반롬피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안정화기구(ESM)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출범됨으로써 유로존 위기의 전이를 막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안정화기구(ESM)의 재원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3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.
  -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이에 대해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함.

■ 유럽안정화기구(ESM)의 재원확충 이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함.

- ① 신재정협약에 서명한 비유로존 정부가 모든 유럽지역 정상회담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와 ② 회원국이 협약에 따른 정부부채비율(debt-to-GDP)을 초과할 경우 유럽재판소(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)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세부사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.

■ 이번 최종안 타결에 의해 신재정협약은 예정대로 3월 1~2일 열릴 정례 EU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임.

(Wall Street Journal, 한국경제 등 1/31)